

「커먼즈와 인권 : 인권의 사회적 조건으로서 커먼즈에 대한 시론적 고찰」에 대한 토론문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박서현

발표문은 커먼즈와 인권의 관계를 탐색한다(3).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 물질 토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2), 커먼즈는 인권을 실현하는 사회적 조건이 될 수 있다. 커먼즈가 인권이 실현될 확률적 개연성을 높이는 조건인 것은 이 때문이다(3).

물론 이러한 개연성을 높이는 것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속에서 가능하다. 인권의 제도적·담론적 위기는 전지구적 자본주의 축적양식의 변동으로부터 비롯됐다(3). 신자유주의의 전지구화로 인한 시민적 권리와 인권의 유보·중지, 사회권의 박탈,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치안국가의 등장에 따른 자유권의 제약이 인권의 후퇴를 낳았다(5).

인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인권의 사회적 조건으로 커먼즈를 주목하는 것은 커먼즈가 제기했던 맥락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 커먼즈는 신자유주의의 전지구화에 저항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는 맥락에서 제기됐다(6). 이러한 모색에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폭력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산양식으로 나아가려는 좌파적 버전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우파적 버전이 있다(6). 중요한 것은 (좌파적 버전의 창출이든 우파적 버전의 창출이든) 새로운 사회경제적 조건을 창출하여 인권 레짐을 재구축하는 것이다(10).

이러한 조건의 창출과 관련하여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에 대해 말하는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발전권선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는 인권 레짐을 재구축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조건에 다를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커먼즈 담론은 필요에 따라 발전권 선언의 정정 방향을 제공하는 식으로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10). 역으로 발전권선언은 다양한 커먼즈 제도화의 구체적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다(11). 예컨대 “천연자원과 부에 관한 완전하고 충분한 주권을 발휘할 인민들의 권리”라는 발전권선언의 내용은 커먼즈 운동이 국제 인권 레짐을 활용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가 될 수 있듯이 말이다(11).

그런데 새로운 사회경제적 조건은 아마도 어떤 운동의 결과로서만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사회경제적 조건을 창출하려는 운동을 커먼즈 운동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 조건은 커먼즈 운동을 통해서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커먼즈 운동은 현재의 경제질서, 경제적 생산을 재구성하려는 운동에 다를 아니다. 경제적 생산을 재구성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자기 증식하는 가치, 잉여가치를 낳는 가치 등 자본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그런데 자본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인 자본-임노동 관계로 사회적 관계를 조직하는 일종의 힘이기도 하다. 사실 자본이 경제적 생산을 조직하는 것은 자본-임노동 관계로 사회적 관계를 조직하는 것에 다를 아니다. 그리고 자본의 힘 혹은 자본 자체가 바로 이러한 사회적 관계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자본은 자기 증식하는 가치, 잉여가치를 낳는 가치이자 이러한 가치 생산의 토대가 되는 자본-임노동 관계로서의 사회적 관계 자체다.

그렇다면 경제적 생산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발본적으로든 어쩌면 이러한 사회적 관계 자체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지 모른다. 이러한 점에서 커먼즈를 인권을 실현하는 사회적 조건으로 이해하는 논의는 현 경제적 생산 자체의 재구성, 현 사회적 관계 자체의 변형 속에서만 인권 레짐이 재구축될 수 있다는 것을, 인권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은 아닐

까?

생각해볼 것은 이러한 함축이 인권을 다소 다른 시각에서 조망할 필요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점이다. 추상적이지만, 혹시 사회적 관계의 변형은 이러한 관계의 향을 이루는 주체, 인간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보편적·기본적 권리로써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는 다소 구분되는, 인간이 이전과는 일종의 다른 감성을 가지는 것,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다른 삶, 인간의 변화는 실은 커먼즈에 대한 논의의 핵심에 있는 주체의 문제, 나아가 오늘날의 경제적 생산의 핵심에 있는 주체의 문제와 관련하여 인권을 다소 다른 시각에서 조망할 필요를 제기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물음을 염두에 두고서 커먼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커먼즈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존재한다. 발표문에서도 제시되듯이 이러한 이해 중에는 사회적 관계 속의 사물, 사물에 배태된 특정한 사회적 관계로 커먼즈를 이해하는 입장이 있다(7). 이러한 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커먼즈에 대한 이해로 커먼즈를 첫째 물질적 세계의 공동의 부라고 할 수 있을 공기, 물, 땅의 결실을 비롯한 자연이 주는 모든 것과 둘째 지식·정보·데이터·이미지·언어·코드 등과 같은 사회적 생산의 결과물 중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차후의 생산에 필요한 것들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다.¹⁾ 본 논의와 관련하여 특히 커먼즈를 사회적 생산의 결과물 중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차후의 생산에 필요한 것들로 이해하는 것에 주목하자. 커먼즈를 생산적 주체들 사이의 사회적 협력의 산물이자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은, 협력적으로 생산하는 주체들로 이루어진 사회적 관계 속의 사물로 커먼즈를 이해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사회적 관계 속의 사물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닌 예컨대 상기한 지식·정보·데이터·이미지·언어·코드 등의 비물질적인 것을 포함한다면 커먼즈에 대한 양자의 이해는 거의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협력적으로 생산하는 주체들로 이루어진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물질적·비물질적 사물인 커먼즈, 생산적 주체들 사이의 사회적 협력의 물질적·비물질적 산물이자 수단인 커먼즈가 신자유주의의 전지구화라는 전지구적 자본주의 축적양식의 변동 속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변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으나 그중 하나로 생산의 중심이 더 이상 대량생산공장이 아닌 사회 자체가 되는 경향 혹은 사회적 공장으로서의 도시 특히 메트로폴리스가 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는 대량생산공장이 생산에서 더 이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량생산공장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예컨대 과거에 인구의 압도적 다수가 농업에 종사했음에도 공업의 생산주기에 농업생산이 종속됐던 것과 같은 식으로 대량생산공장이 생산에서 여전히 지배적 영향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메트로폴리스가 생산의 핵심적 장소가 됐으며 메트로폴리스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생산적 주체들의 사회적 협력이 오늘날의 생산을 추동하고 있다고, 이러한 점에

1) 이 입장은 이탈리아 정치철학자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와 그의 제자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가 대표하는 자율주의(Autonomism)이다(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공통체: 자본과 국가 너머의 세상』, 정남영·윤영광 옮김, 사월의책, 2014, 16-17쪽 참조). 네그리와 하트는 커먼즈라는 용어가 사적 소유의 도래로 인하여 파괴된 (공유지 같은) 전 자본주의적 공유 공간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커먼즈(communs)보다는 '공통적인 것'(the comm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겠다고 말하지만(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다중: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의 전쟁과 민주주의』, 조정한·정남영·서창현 옮김, 세종서적, 2008, 20쪽 참조), 커먼즈와 공통적인 것은 모두 국가와 같은 '공적인 것'(the public)이나 자본과 같은 '사적인 것'(the private)이 아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의 점에서 추상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토론문에서는 개념적 일관성을 위해 공통적인 것이라는 개념 대신 커먼즈 개념을 사용한다.

서 오늘날 생산의 핵심적 장소는 경향적으로 대량생산공장이 아닌 메트로폴리스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저 생산적 주체들의 사회적 협력의 산물의 상당수가 예의 비물질적 생산물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비물질적 생산수단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비물질적 생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동시에 스마트팜 같은, 지식 등이 농업에 적용되는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늘날 비물질적 생산수단이 물질적 생산에 적용되어 물질적 생산 자체가 변형되고 있다. 생산적 주체들의 사회적 협력에 활용되는 비물질적 생산수단과 이러한 협력의 결과인 비물질적 생산물은 물론 대량생산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이기보다는 저 주체들의 사회적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메트로폴리스가 경향적으로 생산의 핵심적 장소가 되는 핵심적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비물질적 생산수단과 생산물은 원리적으로는 생산적 주체들의 사회적 협력의 수단이자 산물이라는 것,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주체들의 공동의 것(공통적인 것), 커먼즈라는 점이다. 물론 저 생산적 주체들 각자가 커먼즈에 무언가를 덧붙이며 이를 통해 커먼즈는 확대되고 심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각자가 덧붙이는 그 무언가는 이미 항상 생산적 주체들의 사회적 협력의 산물로서 존재하는 커먼즈를 활용하여 이 커먼즈에 무언가를 덧붙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예컨대 학술지식 같은 지식의 생산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연구를 통해 지식을 확대하고 심화하는 것이다. 새로운 연구를 통해 기존 지식을 확대하고 심화시킨 데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기여가 연구자들의 공동의 것, 커먼즈인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비로소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비물질적 생산수단을 활용하여 비물질적 생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곧 공동의 것으로서의 커먼즈를 활용하여 커먼즈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지구적 자본주의 축적양식의 변동 속에서 오늘날 축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공동의 것, 공동의 부로서의 커먼즈다. 문제는 생산적 주체들의 사회적 협력을 통해 공동의 부로서의 커먼즈가 확대·심화되고 있지만 동시에 커먼즈가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서 수탈되고 있다는 점이다. 양떼를 키우기 위해 공유지(커먼즈)에 울타리를 친 결과 먹고 살기 어려워진 농민이 도시에 모여들어 노동자와 산업예비군이 된 제1차 인클로저 이후에 비물질적 생산수단·생산물 같은 비물질적 커먼즈에 대한 제2차 인클로저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저작권·특허권 등이 이러한 커먼즈를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 만드는 제2차 인클로저의 주요 수단이다. 이와 같은 식으로 커먼즈가 수탈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수탈이 커먼즈의 확대·심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커먼즈가 더 많이 생산돼야 이렇게 생산된 커먼즈로부터 더 많은 것을 수탈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더 많은 수탈을 위해서도 더 많은 커먼즈의 생산이, 그리고 이러한 생산을 위한 주체들의 사회적 협력의 확대와 심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커먼즈의 생산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어떤 점에서는 인구 전체라고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 지식 생산자 같이 커먼즈의 생산에 직접적·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노숙자처럼 사회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식으로 커먼즈의 생산에 간접적·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사실 신자유주의의 전지구화,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이러한 점에서는 인구 전체가 함께 생산한 공동의 부, 커먼즈를 수탈하면서 성장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했듯 만약 인권의 실현이 어떤 식으로든 경제적 생산 자체의 재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재구성은 인구 전체가 함께 생산하는 동시에 수탈되고 있는 커먼즈를 다시금 인구 전체의 공동의 부로서 재전유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

한 재전유는 생산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집단적 실천이 없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은 이러한 실천 속에서 비로소 가능할 수 있을 주체들의 자기 변화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것일까?

비물질적 생산수단을 활용하여 비물질적 생산물을 생산하는 비물질적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비물질적 생산수단이 물질적 생산에 적용되어 물질적 생산 자체가 변형되고 있는 상황 즉 비물질적 생산수단·생산물과 같은 비물질적 커먼즈가 생산에서 점점 더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이러한 생산에 참여하는 주체에게 낳는 효과는 무엇일까? 그것은 비물질적 커먼즈를 보다 잘 활용하여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량을 가진 존재가 되려는 것,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인적 자본이 되려는 것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오늘날 더 큰 인적 자본이 되려는 열망을 체화하고 있는 주체라는 의미에서의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생산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것은 전지구적 자본주의 축적양식의 변동 속에서 자본이, 자본주의적인 사회적 관계가 (가치 증식을 위해 임노동을 조직했던 것과 유사하게) 더 큰 인적 자본으로의 가치 증식을 위해 자기 자신을 담달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생산하는 식으로 변형·확장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진단에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 인권이 실현될 확률적 개연성을 높이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는, 사회적 협력에 의해 생산된 산물을 사적 소유에 입각한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여 향후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주체가 체화하고 있는 소유 개인주의의 변형 같은 주체의 변화, 인간의 변화와 결코 무관한 것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제2차 인클로저에 맞서 커먼즈를 진정 공동의 것, 인구 전체의 것으로 지키고 가꾸며 키워가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물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일종의 다른 감성을 가지는 것,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과 무관할 수 없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집단적인 자기 변화의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실천은 진정 어려운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로는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때로는 간접적이고 수동적인 사회적 협력을 통해서 커먼즈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생산적 주체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동일한 주체가 호모 이코노미쿠스로 생산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커먼즈를 공동의 것, 인구 전체의 것으로서 지키고 가꾸며 키워가려는 실천 속에서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서 커먼즈를 수탈하려는 경향에 저항할 수 있다. 그것은 이러한 수탈이 우선적이고 일차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커먼즈의 생산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부차적이고 이차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편에서는 커먼즈를 협력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인간의 역량을 다른 한편에서는 커먼즈의 수탈에 맞서 저항할 수 있는 인간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긍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역량, 힘이 있으며 이러한 힘이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하여 생산된 산물, 커먼즈를 수탈하는 것은 이러한 힘에서 파생된 것, 이러한 힘에 기생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토론자가 보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힘, 역량에 대한 긍정이 인간이 가져야 하는 보편적 권리에 대한 보장과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컨대 발전권선언의 내용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역량을 더 잘 펼칠 수 있도록 커먼즈의 수탈을 막고, 인구가 협력적으로 생산한 것이자 차후의 생산에 필요한 커먼즈를 적극적·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이러한 권리를 인간이 스스로 발전·변화하기 위한 토대로서 보장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천연자원과 부에 관한 완전하고 충분한 주권을 발휘할 인민들의 권리라는 발전권선언의 내용이 물질적 세계의 공동의 부로서의 커먼즈만이 아닌 사회적

협력의 산물이자 수단으로서의 커먼즈를 적극적·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로 확장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나아가 “인권의 달성을 원하는 이들과 커먼즈를 구축하는 정치의 동맹을 맺어야 한다”(12)는 문제들은 어쩌면 인권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토대로서 커먼즈를 이해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식으로 모색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커먼즈를 구축하는 정치가, 커먼즈를 협력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리고 커먼즈의 수탈에 맞서 저항할 수 있는 인간의 역량에 대한 적극적 긍정에 입각하여 커먼즈를 (이러한 저항의 실천 속에서만 비로소 가능할 수 있는) 인간의 집단적인 자기 변화의 토대로서 적극적·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운동으로 이해될 수는 없을까? 달리 말한다면, 커먼즈를 구축하는 정치의 핵심에 있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기본적 권리로써의 인권을 보장한다기보다는 저 저항의 실천 속에서 인간이 이전과는 다른 감성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토대로서 커먼즈를 활용하기 위한 권리를 보장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을까? 이러한 의미의 커먼즈를 구축하는 정치는 인간을 보편적·기본적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인간을 저항의 실천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감성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주체,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주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로서 긍정하는 것을 그 기반으로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자가 보기에 이것은 인권과 커먼즈의 관계의 또 다른 가능성일 수 있을 듯하다.